

지방선거와 사이버 정치운동에 관한 이론적
연구: 네트워크 사회의 사이버 정치운동

송 경 재 (Song, Kyong-jae) *

(E-mail : skjsky@gmail.com)

논문접수일 : 2009년 10월 20일
논문심사일 : 2009년 10월 27일
게재확정일 : 2009년 11월 25일

* 학위취득대학 : 경희대학교
현직: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학술연구교수

지방선거와 사이버 정치운동에 관한
이론적 연구: 네트워크 사회의 사이버
정치운동*

〈국문요약〉

선거과정에서 인터넷 이용은 한국에서 보편적인 캠페인 방식이 되었다. 지난 2002년과 2007년의 대선, 2004년과 2008년의 총선에서 각 후보들은 적극적인 사이버 정치운동을 전개했고 일정한 효과를 보였다.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서는 아직 인터넷 활용에 대한 분석사례가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네트워크 사회에서 사이버 정치운동의 가능성과 한계를 한국의 지방선거를 사례로 적용하여 탐구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사이버 정치운동은 위로부터의 하향식과 아래로부터의 상향식 사이버 정치운동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목적과 방식에 따라 상이한 사이버 정치운동의 결과를 유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2가지 방식의 사이버 정치운동은 장기적으로 지역이슈의 확산이나 의제의 형성 그리고 시민참여를 증가시킨다는 장점이 있었다.

[주제어] 지방선거, 사이버 정치운동, 네트워크 사회, 지렛대 효과, 네트워크 연계성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005-J01802). 세심한 지적으로 논문의 완성도를 높여주신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논문은 호남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9년 국제학술대회 「2010년 지방 선거에 대비한 민주시민교육」 발표논문 중 일부 수정한 것임.

I. 들어가며

선거 국면은 일반적으로 정당과 후보자가 유권자의 지지를 소구하기 위한 공간이며 정치적 관심의 공간이 된다. 그래서 선거 국면은 단순한 국민의 지지 확인을 벗어나 정치적 경쟁의 공간이 되며, 정당과 후보자는 이를 위한 조직과 동원의 캠페인 방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선거운동에서 새로운 현상이 등장하는데 인터넷을 매개로 하는 사이버 정치운동(cyber political movement)이 그것이다.

인터넷 등장은 정치과정에서 다양한 변화상을 재구성하고 있다. 단순한 미디어로서 커뮤니케이션의 변화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고도의 정치행위까지 인터넷의 영향력은 상상을 불허하고 있다. 정치적 효과분석에서 2002년 한국의 노사모와 2008년 미국 대선과정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웹 2.0 사이버 정치운동의 경험은 널리 알려진 바다.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2009, 3-4)의 조사에 따르면, 2008년 미국의 성인들 중 약 44%, 인터넷 사용자 중 60%가 정치정보와 뉴스를 인터넷으로 습득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 미국 대선 기간 동안 인터넷을 매개로 하는 활발한 정치정보 상호작용이 있었고 일정부분 선거에 영향을 미쳤음을 추론케 한다. 이러한 변화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다. 강원택(2008; 2007, 66-67)의 연구에 따르면, 정보사회 선거와 정당의 변화를 인터넷이라는 대안적 매개를 가진 다양한 참여현상에 주목하고 있는 것도 이런 특징의 반영일 것이다. 송경재·민희(2009, 71)도 지난 18대 총선과정에서 정치정보 수용은 정치참여와 높은 인과성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고 선거에서 정치정보 수용에 투표 참여시민들이 적극적이었음을 증명했다.

이러한 국내외의 경험은 선거에서의 사이버 정치운동 활성화 가능성에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당과 후보자들은 인터넷의 선순환 효과에 주목하고 정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조밀도를 제고하고, 시·공간적 경계를 허무는 정치 조직화와 동원효과를 모색하고 있다

(장우영 2007, 96; Chadwick 2006).

무엇보다 인터넷의 도입은 시민참여적인 성격을 극대화해준다. 선거과정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정치운동의 등장은 단순히 정당과 후보자 차원에만 한정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다른 형태의 정치정보 공급자와 유통자, 분배자가 등장한다. 그것은 시민 스스로가 조직하고 인터넷을 매개로 사회운동을 하는 집단이 주도한다. 이를 사이버 행동주의(cyber activism), 참여군중(smart mobs)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네트워크의 참여적 성격과 확산성,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성,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해야 한다(장우영 2007; Davis, Elin and Reeher 2002). 전통적인 시각에서 선거는 하향식 정치정보의 흐름과 제한적인 정치행위자와 다수의 시민으로 양분되었다. 하지만 인터넷의 등장은 시민을 수동적이고 대상화 된 존재가 아닌 스스로 조직화하고 동원하는 하나의 주체로 등장할 계기를 준다(Anderson, and Cornfield 2003).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선거운동은 단순히 일방향적인 정당과 후보자가 제공하는 과정이 아닌 시민과 상호작용하면서 조직화와 동원의 주체로 진화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송경재·민희 2009, 71-7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시각을 바탕으로 사이버 정치운동을 “단순히 좁은 차원의 정당과 후보자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웹 캠페인 구조에 한정하지 않고 선거공간에 형성되는 다양한 정치 상호작용과 동학, 그리고 새로운 변화적 과정의 정치 활동의 총합”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할 것이다. 연구자가 사이버 정치운동을 단순한 웹 캠페인이 아닌 정치 상호작용과 메커니즘의 종합으로 정의하는 것은 첫째,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의 참여적 성격과 확산성,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성, 접근성이라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둘째, 웹 기반 캠페인 분석을 바탕으로 선거공간에서 정치정보의 습득과 후보-시민 상호작용, 시민참여 메커니즘, 정치의식화와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효과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거 국면에서 사이버 정치운동을 다층적인 차원에

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사이버 정치운동의 양 측면이 선거에서 어떤 효과와 영향이 있는지를 규명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지방선거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한 대응과 사이버 정치운동의 함의를 제시할 것이다.

연구의 세부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I 장은 선거과정에서의 사이버 정치운동에 대한 연구의 흐름과 개념 정의, 연구 목적을 제시한다. II 장은 기존 정치학에서 논쟁 중인 웹 캠페인 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III 장에서는 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여 연구 분석틀과 변인을 제시한다. 그리고 IV 장은 지방선거에서 나타나는 투 트랙(two track) 사이버 정치운동을 구분하고 이를 각 변인별로 사례 분석한다. 마지막 V 장은 분석 내용을 요약하고 연구문제를 증명, 함의를 제시한다.

II. 정상화와 동원가설의 격돌

초기 인터넷 정치현상에 대한 연구는 두 가지 흐름으로 구분된다. 그것은 과연 인터넷이 정치과정에 도움이 될 것이냐 또는 아니냐에 대한 전통적인 논의이다. 낙관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정치에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은 새로운 방식의 민주주의를 확대시킬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비판론은 정보통신기술이 기존 정치구조의 해체 내지는 기형화를 가져와 민주주의를 쇠퇴시킬 가능성을 경고했다(Davis, Elin and Reeher 2002; Barber 2000).

그러나 초기의 연구 흐름은 인식론적 발전이 더디고 실증분석이 없는 상황에서 학계에서 논의되었다. 그러다 보니 초점이 연구가설의 인과성문제를 증명하기 보다는 담론 분석과 이론적 접근에 치우친 문제점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논의 구조는 “텔레디모크라시(teledemocracy), 메가트렌드(megatrends)” 등의 용어에서 확인되듯이 정보사회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Chadwick 2006; 김용철·윤성이 2005; Gibson, Nixon and Ward 2003; Arterton

1987).

이후 인터넷 정치과정에 대한 많은 연구는 주로 효과에 관한 기능 분석에 집중한다. 즉, 인터넷이 도입됨에 따라 “정치과정에 어떤 변화 내지는 효과가 존재 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가져오는 정치과정의 변화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었다. 이러한 인터넷의 정치적 효과는 동원 가설과 정상화 가설로 구분된다.

먼저, 동원 가설(mobilization thesis)은 2002년과 2003년 그리고 2008년의 굵직한 선거 국면에서 증명된다. 물론 인터넷 활용 초기 1998년 미국 미네소타 주지사 선거에서 소수정당(개혁당)의 제시 벤츄라(Jesse Ventura) 후보가 다수당인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웹 캠페인 덕분이었다(김용철·윤성이 2005, 29). 본격적인 동원가설에 대한 논의의 시작은 하워드 딘(Howard Dean)에게서 발견된다. 그는 2003년 미국 대선에서 밋업닷컴(<http://www.meetup.com>)의 블로그 네트워크 사이트를 활용, 참여적이고 역동적인 사이버 정치운동을 전개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선거 전략가인 조 트리피(Trippi, 2004)는 사이버 정치운동의 가능성에서 시민의 조직과 동원효과가 가능함에 주목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경험은 2002년 대선과정에서 존재한다. 물론 아직까지 실제적인 표로 연결되는 효과에 어느 정도의 설명력이 있었는지 논란은 존재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터넷이 없었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선은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평가다(장우영 2007; 김용호 2003). 실제 당시 노사모의 활발한 사이버 정치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으며 “세계 최초의 인터넷 대통령”(The Guardian 2003년 2월 22일자)의 등장으로까지 평가 받고 있다.

이외에도 국내에 소개는 되지 않았지만 영국과 프랑스 등지에서도 동원가설을 증명하는 다양한 사례가 발견된다. 2007년 프랑스 대선운동 과정에서 사르코지 후보는 소셜 네트워크킹(social networking) 웹 사이트인 마이스페이스닷컴(<http://www.myspace.com>)에서 지지자들

을 동원하는 웹 전략을 성공적으로 구사했다고 평가 받는다. 이와 같이 선거 국면에서 나타나는 사이버 정치운동의 가능성은 구체적으로 후보자의 당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와 함께 동원가설은 웹의 선거에 있어서 정치적 효과와 관련되어 정치커뮤니케이션 매개체 역할을 통한 정치정보 습득과 동원의 가능성에 주목한다(Tedesco et al. 1999, 54; Foot and Schneider 2006; Cornfield 2002; Davis, Elin, and Reeher 2002).

그러나 동원 가설에 대한 다양한 사례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거과정에서 동일한 효과가 발견된 것은 아니다. 실제 모든 선거에서 인터넷 동원효과가 동일적으로 적용되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경향을 오프라인 선거환경의 온라인 이행이라는 차원에서 정상화 가설(normalization thesis)로 구분할 수 있다. 대표적인 정상화 현상은 미국 2004년 대선과 한국의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이라고 할 수 있다. 3번의 선거과정을 살펴보면 각각의 이슈나 성격은 차이가 있지만 인터넷 정치 결과로서만 본다면, 오히려 인터넷 온라인 공간의 정치활동은 조용했다. 실제적으로는 다양한 사이버 정치운동이 등장은 했지만 시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중요선거가 아닌 재·보궐 선거나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지는 선거에서 정상화가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정상화 가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선거과정에서 웹 활용이 적은 거래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지만 그 효과에 관한 보증을 없다고 주장한다(Shirky 2008; Chadwick 2006; Margolis and Resnick 2000).

데이비스(Davis 1999, 119)도 동원가설에 반대해, 인터넷 정치는 단지 오프라인의 정치가 온라인으로 이행(offline politics moves online)한 것으로 평가한다. 콘필드(Confield 2002) 역시 개인의 거래비용 감소로 인한 정치 민주화에 참여의 좋은 개인적인 기회는 제공했는지 모르지만 실제 정치과정의 실존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선거에 있어 유용한 수단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초기 선점 효과나 기대효과는 존재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정치적 자원이 많은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결집되는 역효과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정치적 자원의 불균등도 결국 온라인에서의 효과를 제시하는데 있어 하나의 변인이 된다. 그리고 모든 정당과 후보자가 같은 웹 캠페인을 채택할 경우, 오프라인의 정상화 효과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채드윅 역시 이러한 측면을 강조하면서 인터넷 선거운동이 기존의 후보자 선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결국 오프라인의 제도에 포섭되는 제도적 적응 모델로 나아갈 것으로 본다(Chadwick 2006, 148-149; 강원택 2007, 42-44).

인터넷 선거운동이 정당과 선거과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국내에 인터넷 정치학이 소개된 이후 계속된 연구주제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연구 역시 두 가지 흐름이 주류를 이루면서 논쟁이 전개된다. 각각의 연구대상과 변인의 설정은 차이가 존재하지만 구체화된 인터넷 선거운동의 효과에 대한 측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연구는 주요 선거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상화, 동원 가설이 각기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먼저 동원가설에 관한 논의는 윤성이(2003), 유석진·이현우·이원태(2005), 강원택(2007) 등의 연구가 있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도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간접적인 효과를 증명한다. 강원택(2007)과 장우영(2006), 송경재(2005)의 경우 대선과 총선과정에서 나타난 미니홈피, 정치패러디, 노사모 등의 적극적인 활동에 주목하고 이들이 정치적 동원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한다. 그리고 정상화 가설을 증명한 연구도 많다. 윤성이(2008), 김용철과 윤성이(2004) 등은 총선에서의 인터넷 효과가 상당부분 제한적이었음을 밝힌다. 그리고 최근 18대 총선을 분석한 송경재·민희(2009)의 연구도 정치정보 습득에서의 제한적 효과를 밝힌 바 있다.

Ⅲ. 분석틀의 제시

이상에서 우리는 기존 연구에 대한 흐름을 초기 낙관론과 비관론

의 관점과 후기의 동원가설과 정상화가설로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를 종합하면, 정보사회에서 선거과정의 인터넷 효과로서 정상화와 동원가설의 공통점은 어느 것이든 인터넷이 정치적 동원기제의 하나가 되었음은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영향도가 직접 투표행위까지 연결되는지, 아니면 정치정보의 공급과 소비수단에 머무르는지에 대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물론 기존 연구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세 가지 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선거와 인터넷 효과분석이 실제 선거에 있어 결과론적인 분석 수단으로는 유효하지만 구체화 된 동학과 흐름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 따라서 실제 선거과정에서의 다양한 정치운동의 이해와 형태를 사회과학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선거과정에서 나타나는 인터넷 효과를 이분법적인 정상화와 동원가설이란 이항 독립적인 이론으로만 설명하는데 오는 방법론적 접근방법의 오류가 발견된다. 종합적 시각의 부재는 기존 연구성과와 사이버 정치운동에 대한 낮은 인식수준에 그 원인이 있다고 평가된다. 단순히 선거기간 동안의 하향식 정치정보의 제공과 운동에서의 활용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아래로부터의 정치운동이란 점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으로 기존 연구가 지나치게 대선과 총선에 대한 연구에 집중한 나머지 다양한 선거 국면에서의 효과에 대한 체계화 된 분석을 시도하지 못하다는 문제점도 발견된다. 물론 지방선거의 특성상 난립하는 후보로 인한 선택의 문제나 전국적인 이슈에 묻혀 버려 실제 지역후보에 대한 관심의 저하, 인터넷 활용의 한계라는 어려운 점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지방선거에 대한 사이버 정치운동에 대한 연구의 부족은 대선과 총선으로 설명되지 않는 지역 단위의 정치운동이라는 차원에서 의미성이 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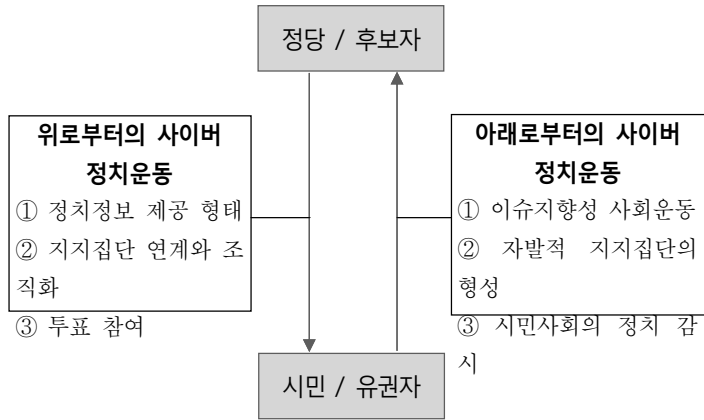
그런 차원에서 본 연구는 사이버 정치운동을 두 가지 측면에서 분

석하고자 한다. 우선 콜먼과 블룸러(Coleman and Blumler 2008)는 인터넷에서의 민주주의 효과를 두 가지의 흐름으로 제시한다. 그것은 위로부터의 효과와 아래로부터의 효과이다. 그들은 민주주의의 인터넷 효과에 대해 다양한 제시와 함께 구체화 된 사례를 바탕으로 근심과 낙관주의가 동시에 배태되어 있지만, 활용 면에서 민주주의의 증진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콜먼과 블룸러의 논의를 차용해 본 연구에 적용한다면, 사이버 정치운동 역시 2가지 형태로 구분이 가능하다.

첫 번째 형태는 위로부터의 사이버 정치운동(cyber-political movement from above)으로 선거환경에서 제공되는 정당과 후보자에 의한 일방향의 커뮤니케이션과 참여, 동원 형태이다. 따라서 권위체에 의한 시민의 수용성과 선거 시기 활발한 정치적 활동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룬다. 그런 맥락에서 분석에서 살펴볼 변인은 정치정보의 제공 형태, 지지집단 연계와 조직화, 투표참여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아래로부터의 사이버 정치운동(cyber-political movement from below)이다. 이는 정당, 후보자와 시민간의 상호작용성의 관계를 파악하고 정당이나 후보가 아닌 시민이 이니셔티브를 장악하는 방식의 상향식 사이버 정치운동을 지칭한다. 지방선거에서 아래로부터의 사이버 정치운동은 상향식과 상호작용성을 모두 포괄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볼 변인은 지방선거에서 선거공간에서의 이슈지향성 사회운동, 자발적 지지집단의 형성, 마지막으로 시민사회의 정치 감시 운동을 살펴 볼 것이다.

< 그림 1 > 분석의 틀



IV. 지방선거와 사이버 정치운동 분석

1. 위로부터의 사이버 정치운동

위로부터의 사이버 정치운동은 정당과 후보자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는 사이버 정치운동이다. 당연히 정당과 후보자의 정치목적은 당선과 지지를 제고이다.

먼저, 정치정보 제공 형태는 대부분 정해진 선거규칙에 따라 제공되고 있다.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정치정보는 주로 개인 홈페이지(또는 블로그, 미니홈피), 정당 사이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있다. 이들 정보는 모두 선관위 규칙에 따라 제공되며 세부 메뉴 역시 같은 패턴을 보인다. 예를 들어,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전남도지사에 출마한 열린우리당 서범석후보와 한나라

당 박재순후보, 민주당 박준영후보 그리고 민주노동당 박용두후보 등은 모두 개인정보, 선거비용, 재산과 병역, 납세, 전과 조회, 선거공약과 자유토론 게시판을 비슷한 아키텍처로 운영했다.

이들 후보들은 유권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기 위해 미니홈피와 블로그 등 웹 2.0 방식의 서비스도 활용했다. 하지만 제공되는 정보의 양은 많지 않았다. 선거에서 도지사로 당선된 박준영후보의 미니홈피(<http://www.cyworld.com/jeonnamlove>)는 200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방선거 기간 동안 총 게시물 58건에 불과하다. 그만큼 웹 2.0의 소셜 네트워킹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단순한 정보전달의 창구로서 활용했음을 알려준다. 그리고 58건 대부분이 기존 면식 있는 이들과의 안부가 중심이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정치동원을 위한 정치정보를 제공 공간은 아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위로부터의 다양한 정치정보 제공의 사례는 1998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공화당의 덴 런그렌(Dan Lungren)은 비록 낙선했지만 주지사 출마 캠페인에서 웹 페이지에서의 연설문이 주목을 받았다. 홈페이지 방문자를 대상으로 단순 방문자를 투표자로 전환시키기 위해 출마 연설문을 게시하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웹 기반 캠페인과 정보제공을 시행해 많은 이들이 주목했다(Levine 2002, 49).

한편 정당으로부터 제공되는 정치정보에서 지방선거에서 흥미로운 것은 민주노동당이다. 물론 다른 정당에서도 보도 자료를 인터넷 홍보자료로 활용했지만 민노당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소식(일명 5.31 소식)>을 보도자료 방식으로 인터넷 서비스했다. 여기에서는 중앙당 정보와 함께 단체장과 의원 후보 일정이 모두 공개되어 있고 이를 <연합뉴스>를 통해 주요 포털사이트에 제공했다. 이를 통해 많은 정치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지지집단의 연계와 조직화에 대한 분석이다. 지지집단의 연계와 강화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먼저, 정당 차원의 후견 조직(인터넷 청년 및 여성조직)을 활용한 것과 둘째, 개인 후보자의

자원봉사조직이 존재한다. 정당 차원의 후견조직은 인터넷 상에서 회원으로 가입하여 사이버 당원이 되거나, 오프라인 정당지지의 연장선 상에서 활동한다(송경재 2007). 그러나 선거기간에 많은 활동이 오프라인에서 움직이는 정당운동의 특징으로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별도 지지집단에 대한 연계와 조직화가 활성화되는 메뉴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후보자는 자원봉사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이버 정치운동을 활용한다. 2006년 5.31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는 적극적인 지지집단의 연계와 조직화를 시도한다. 공식 홈페이지에 자원봉사 회원추천과 이메일 주소 돌리기 등을 통해 지지집단 결집을 유도한다. 그리고 지역구 친구 소개하기 등을 통해 중도 내지는 무당파 층에 대한 지지 유입을 시도하기도 했다.²⁾

이상 분석에서 살펴보지만 지지집단 연계와 조직화는 정당과 후보단위에서 선거기간 동안 인터넷을 통한 접근은 그리 높지 않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가 가장 관심지역임을 감안하면 지역의 시군구 단체장이나 지방의회는 홈페이지를 통한 지지집단 강화보다는 오프라인 활동을 주로하고 온라인 활동은 부수적인 활동에 머물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사이버 정치운동의 동원으로서의 투표참여 독려이다. 정당과 후보자 모두 투표참여를 위한 방식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율은 68.4%였으나 1998년 제2회는 52.7% 2002년 제3회는 48.9%, 지난 2006년 제4회는 51.6%에 머물렀다(선관위 <http://www.nec.go.kr>). 그렇지만 2006년 지방선거에서부터는 투표참여 사이버 정치운동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물론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는 없었고 그 인과성에 대해 증명을 할 수는 없지만 선거기간 동안 캠페인의 한 방법으로 인터넷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모든 정당과 후보자들은 문

2) 하지만 이는 후술하겠지만 자발적인 지지집단의 아래로부터의 사이버 정치운동과 결합되면서, 다른 양상으로 발전한다.

자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해 다양한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리고 웹 2.0을 활용한 UCC와 투표참여 패러디 등을 통해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이 나타났다.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투표참여 사이버 정치운동은 향후 젊은 층의 투표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새로운 미디어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위로부터의 사이버 정치운동은 다분히 행위자 간의 역할 분담이 분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정치정보를 제공하는 정당과 후보자, 선관위가 존재한다면 이를 수용하고 수동적인 선거관여도를 증진시키는 시민이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이 방식은 구체화된 선거운동기간 동안의 동태적인 사이버 정치운동의 동학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세밀한 분석은 아래로부터의 사이버 정치운동에 대한 분석일 것이다.

2. 아래로부터의 사이버 정치운동

첫째,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이슈지향성 사회운동에 대한 부분이다. 사실 앞서 지적한 바, 지방선거에서는 상대적으로 선거 관심도가 낮아진다는 맹점이 있다. 이는 투표율의 지속적인 하락에서 잘 발견된다. 하지만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일반화된 현상으로 지역이슈가 부각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지역이슈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이를 통한 다양한 사이버 정치운동을 전개한 사례도 발견된다. 르바인(Levine 2003, 49)이 지적한 “이슈그리드(issue grids)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³⁾

물론 이런 아래로부터의 사이버 정치운동은 비단 선거 국면에서만 한정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일상 시기에도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정치이슈화는 자주 나타난다. 2005년 1월 “서귀포 부실도

3) 정보통신용어에서 그리드(grid)는 진공관의 음극과 양극의 중간에서 전류의 흐름을 통제하는 격자(格子)에서 유래한 용어로서 웹의 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여기서는 이슈의 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시락 사건”은 당시 시민단체인 <탐라자치연대>가 인터넷을 통한 적극적인 사회고발에서 이루어졌다. 결식아동에게 방학 중 제공되는 도시락의 질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은 그야말로 정책비판과 개선의 목소리로 덮였다. 도시락의 내용은 매추리알, 게맛살, 단무지 혹은 건빵 몇 개에 불과했지만 이러한 부실 도시락이 단지 서귀포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역 전체의 문제란 것이 알려지면서 해당 관청 홈페이지에는 업체의 상흔과 당국의 졸속 행정을 비난하는 네티즌들의 항의글로 결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과하고 정책개선을 이룬 사건이다. 인터넷에서의 이러한 이슈 기반형 사회운동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있는 셈이다.

이러한 정책적인 문제가 지방선거의 특성을 반영할 경우, 지역문제에 대한 사회적 이슈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천광역시시의 경험이다. <인천녹색연합>은 2006년 5.31 지방선거에 출마한 41명의 구청장 후보를 대상으로 환경이슈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다. 주로 이메일과 홈페이지 검색, 직접 답변서 제출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지역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여 인천의 환경이슈에 대한 문제제기를 성공적으로 하게 된다.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사이버 정치운동은 인터넷을 매개로 더욱 활발한 토론의 공간으로 이동한다. 운동의 결과로 공개된 내용은 41명의 구청장 후보 중에서 단 한 개의 환경공약도 제시하지 않은 사람이 6명이나 되었으며, 41명중 절반이 넘는 24명이 3개 이하의 빈약한 환경공약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갯벌 추가 매립 금지에 연구구청장 A후보, 광역시장 B후보, 자진거 도로 확충에 연구구청장 C후보, 부평구청장 D후보와 같은 방식으로 평가를 했다. 그리고 이를 인터넷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언론사와 각종 포털 사이트 토론방에서 인 천시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슈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를 한다.

둘째, 아래로부터의 사이버 정치운동은 선거운동 기간 자발적 지지 집단의 조직과 동원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존 정치인 팬클럽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도 발견되지만(김용호 2003; Shirky 2008) 다양한 형태

로 나타난다. 선거기간 동안 합법적인 정치인 지지활동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아래로부터의 사이버 정치운동의 핵심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2006년 지방선거에서 인기 정치인들은 자발적인 팬클럽의 도움을 받았다. 대표적인 인물이 서울시장에 도전했던 강금실후보였다. ‘강금실을 좋아하는 사람들(<http://cafe.daum.net/kangkumsil>)’은 서울시장 경선에서부터 캠페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경선과정에서 당시 추미애 후보의 팬클럽인 ‘추미애를 사랑하는 모임(<http://cafe.daum.net/minjusrang>)’과의 인터넷 정책토론과 지원 사이버 정치운동은 여러 언론에 의해서 회자되었다. 이후 경선은 강금실 후보가 승리했고, 회원 수만 4,700명(2005년 12월 말 기준)에 달하는 전국적인 팬클럽으로 성장해 선거과정에서 다양한 정치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했다. 마치 노사모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팬클럽이 지방선거에서도 활동의 유용성을 확인해 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http://www.hani.co.kr> 검색일 2009년 10월 10일).

그리고 5.31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승리를 이끌었던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인 ‘박사모(<http://cafe.daum.net/parkgunhye>)’의 사이버 정치활동은 2004년부터 각종 오프라인 정치활동에서 그 위력을 보인 바 있다. 박사모는 회원 수만 2009년 10월말 까지 50,000여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방선거에서 박의원 유세마다 조직적으로 참여해서 그녀의 행보에 힘을 실어 주었다. 이러한 정보와 지역 연계는 모두 인터넷을 통해 재결집되었고 직접 오프라인으로까지 활동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의 사이버 정치활동이다. 박근혜의원이 개설한 미니홈피는 정치인과 시민이 직접 상호작용하는 공간으로 웹 2.0 방식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이다. 간단히 요약하면,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박근혜의원의 월간 방문자 수는 43,000명이 넘고 페이지뷰(page view)는 최고 3,500,000뷰가 넘었다. 1인당 페이지 뷰도 10.59뷰로 많은 이들이 정치인 박근혜와 소통하는 공간으로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강원택 2007, 126).

이러한 자발적 지지집단으로서의 팬클럽은 딱딱하고 건조한 이미지의 정치인을 연성화했고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인물에 대한 친근감을 주었다.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 자발적인 팬클럽의 활동은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의 저렴한 참여비용, 시·공간의 제약이 없고, 자기 진화하는 네트워크의 형성이라는 이점으로 지지집단을 형성 강화하는 사이버 정치운동을 가능케 한다.

자발적인 지지집단이 팬클럽의 형태로만 조직화되는 것은 아니다. 바로 느슨한 연계의 조직으로도 구성된다. 선거운동 기간 아래로부터의 사이버 정치운동은 단순히 정치관련 콘텐츠를 공급하고 유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약한 연계(weak ties)의 정치적 사회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기제가 될 수 있다(Granovetter 1973). 대표적인 것이 블로그 네트워크를 활용한 밋업닷컴이다. 앞서도 살펴보았지만 자발적인 조직화를 통한 지역선거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아래로부터 시민이 이니셔티브를 가진 사이버 정치운동의 단초를 제공한 사례이다. 지역 내에서 정치 동호회 참석자들은 밋업을 통해 정치활동을 함으로써 생활 속에서의 지역 정치 네트워크(local political network)를 구성한다. 많은 후보자들은 그들의 선거운동을 지지하기 위해 이러한 서비스를 사용해왔다(MoveOn.org Staff 2004; Trippi 2004).

셋째, 시민사회의 단순 투표참여가 아닌 능동적인 정치 감시활동이 가능하다. 아래로부터의 사이버 정치운동은 선거의 단순 참여자가 아니라 일상적·능동적인 정치 행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2009) 방식의 정치 감시운동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운동은 지방선거가 종결된 이후라도 웹을 활용하여 공약에 대한 검증과 확인, 정치인 비리 감시활동을 통해 선출직 공무원을 견제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방권력에 대한 검증을 위해 매년 전국 광역·기초지방의원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선거공약 게시유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09년 9월 28일 기준으로 전국

16개 광역의회와 230개 기초의회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방의원 3,579명의 중 5.42%(190명)만 홈페이지에 자신의 선거공약을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홈페이지에 공약을 게시한다는 것은 선거이후에도 공약을 이행하고 주민들과의 지역발전 약속을 얼마나 소중히 하는지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행해진다. 그렇지만 홈페이지 숫자는 2008년 대비 18.71% 늘어났지만 공약 고시는 2.09% 증가에 그쳤다. 국회의원들은 84.49% 공약실천 내용을 공개하는 것에 비하면 190명이란 숫자는 미약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이런 활동은 아래로부터의 사이버 정치운동의 일환으로 지방의회와 지방의원들의 선거공약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고, 지방의원의 공약이행과정에 효과적으로 사이버 시민운동을 조직함으로 지방자치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2009).

버만과 멀리간(Berman and Mulligan 2003, 81-91)은 이러한 방식의 정치운동을 선거참여만이 아니라 상시적인 시민감시의 방법으로 그리고 의견 주창의 공간으로 웹 활용의 가능성을 이미 진단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아래로부터의 사이버 정치운동은 단순히 선거 국면 이외 시기에 정치 감시운동을 실시할 수 있는 웹이란 사회적 무기를 시민들이 가지게 됨을 의미한다.

3. 투 트랙 사이버 정치운동의 함의

이상에서 분석한 두 가지 형태의 사이버 정치운동에 대한 평가는 각각 장단점이 동시에 발견된다. 먼저, 논의할 것은 반드시 위로부터의 사이버 정치운동과 아래로부터의 사이버 정치운동 중에 좋고 나쁨을 구분할 필요는 없다. 단지 위로부터의 사이버 정치운동의 자체적인 동학이 별도로 존재하고, 마찬가지로 아래로부터의 사이버 정치운동도 그렇다. 내용과 정치적보의 유통과 목적, 이슈제기 능력, 정보의 흐름 등이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아래로부터의 사이버 정치운동의 가장 중요

한 장점은 이슈와 조직화, 동원의 과정에서 시민의 이니셔티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여기서 아래로부터의 사이버 정치참여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적인 요인 중의 하나가 한정된 정치자원(political resources)의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자의 역할이 융합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정치과정에서 정치정보는 주로 생산자 위주의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확산되었다면, 최근 웹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정치정보의 흐름동향 바텀-업(bottom-up)을 넘어서 수평적인 상호작용성이 강화되면서 정치정보 생산자와 수용자의 경계가 모호해진다(foot and Schneider 2006; 송경재·민희 2008).

< 표 1 > 두 트랙의 사이버 정치운동 분석 비교

	위로부터의 사이버 정치운동	아래로부터의 사이버 정치운동
정치운동의 목적	· 후보자 : 당선 · 정당 : 지지율 제고	· 자발적인 후보 지지운동 · 시민사회의 권능 강화
방법	· 웹 사이트 중심의 활동 · 오프라인 연계형 유도	· 오프라인 연계형 운동 전개 가능 · 상호작용적인 강화효과 가능
이슈제기 능력	· 지방이슈의 부각 어려움	· 지역이슈 부각 가능
정치정보의 흐름	· 하향식 · 정보제공자 : 정당, 후보, 선관위	· 상향식 · 상호작용적인 정보흐름
장점	· 정당과 후보 정치정보 제공 · 지지집단 및 온라인 정치 활동가(online political activist) 연계 · 투표참여 독려 및 후원금 운동	· 지역 이슈의 부각(이슈격차 효과) · 자발적 지지집단의 조직화 가능(밋업/정치인 팬클럽 등) · 능동적·일상적 정치 감시 활동 · 시민의 주도적 활동 가능
단점	· 지지 동원·투표 참여 유도 · 후보-시민간의 상호작용성 제한 · 탑-다운형 사이버 정치운동 한계	· 과도한 정치몰입 따른 팬덤 현상 · 이념/지역/세대별 분절화 · 현행 선거법의 인터넷 규제조항 · 지방선거의 실효성 검증 불가

두 번째 지적해야 할 함의는 위로부터의 사이버 정치운동이 비록 유권자의 지지·동원을 기반으로 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지자들의 몰입에 따른 새로운 지지집단을 만들 수도 있다. 예컨대, 후보자가 정치정보 제공과 수용에서 시민들과의 강한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지역 이슈에 대한 심의와 토론이 가능하다면 자발적 지지집단의 사이버 정치운동이 나타날 수 있다. 물론 이런 경우 대부분이 오프라인에서의 정치적 기반이 있는 경우 더욱 활발한 특징을 가진다. 이런 문제점은 정치적 팬덤(fandom)에 따른 과도몰입 문제가 존재한다. 이슈와 정책에 따른 지역 후보 지지가 아닌 개인에 대한 지지로 전환될 경우, 사이버 상에서 하나의 지지집단과 파벌로 되어 지역발전에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자발적 지지집단은 이와 같은 이중적인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해석된다.

셋째, 지방선거에서 두 트랙의 사이버 정치운동은 그 형태가 어느 것이던 여전히 정보격차의 문제는 아직 남아있다. 이는 대도시권 선거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중소도시나 읍면단위 선거에서 정보격차가 발생하고 그 효과 또한 낮게 평가될 것이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정보격차가 지식격차와 “정치 정보 격차(political information divide)”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미 한국의 인터넷 인구는 2008년 말 현재 3,536만 명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낙후된 지방에서의 정치정보 격차는 향후 정치적인 소외지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2009년 11월 12일).

넷째, 아래로부터의 사이버 정치운동이 어떤 조건에서 활성화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지방선거의 특성상 광역선거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 후보자의 면면을 알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더욱 아래로부터의 사이버 정치운동이 지역이슈의 부각이나 지지집단의 조직화라는 강점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함의로 지방선거에서의 사이버 정치운동은 주로 위로부터의 형태가 주를 이룬다. 아래로부터의 사이버 정치운동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형태라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그 반대

일 수 있다. 하지만 아직 활성화 되지 않은 아래로부터의 사이버 정치운동은 지역의 자치 강화와 시민의 권능을 강화하는 형태로서 선거의 당락을 넘어서는 중요성을 가진다. 따라서 사이버 정치운동은 단기간에 나타나기 보다는 조건이 성숙했을 때 나타날 수 있다. 후보자와 이슈가 제기될 경우 해당 지역에서의 웹 기반 선거가 활력을 가질 수 있다. 인터넷이 지지후보와의 결합과 그 효과를 극대화 한다면 아래로부터의 사이버 정치운동이 지방선거기간에도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미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방선거에서 활발한 사이버 정치운동은 점차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강화된 <공직선거법>이 인터넷에서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인터넷 선거운동의 중요한 장애요인이다.⁴⁾ 그리고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의 여러 조항은 사이버 상의 정치운동을 제약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제도가 오히려 웹의 정치적 이용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은 향후 지방선거에서 사이버 정치운동의 역할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을 짐작케 한다.

V. 결론에 대신하여

르바인(Levine 2003, 47)이 세이거(Seiger)의 발언을 인용해 주장한 바, 인터넷은 본질적으로 민주적 도구이다. 그리고 인터넷은 모든 개별적인 사용자도 정치자원의 제약이 없이 행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이버 정치운동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선거기간동안 사이버 정치운동의 실제적인 동학과 영향력에 대한 효과분석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이런 의도에서 본 연구는 국내외의 지방선거에

4) 선거법 93조1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광고나 벽보, 문서, 기타 유사한 것의 배포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다.

서 사이버 정치운동을 두 트랙으로 구분하여 위로부터,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사이버 정치운동을 분석했다. 그리고 각각의 세부적인 변수를 바탕으로 사례를 분석했다. 연구에서 유도된 것은 위로부터의 사이버 선거운동이 정당과 후보자가 주도하는 형태라면 아래로부터의 사이버 정치운동이 자발적이고 보다 역동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만이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의 정치 감시운동의 조직화 측면에서 웹의 활용이란 장점이 확인된다.

분석의 종합적 함의를 정리한다면, 첫째, 정치운동 목적 면에서 2가지 방식은 차이가 있다. 위로부터의 사이버 정치운동이 후보자는 당선, 정당은 지지를 제고라는 목적이 있고, 아래로부터의 방식은 자발적 후보 지지운동이자 시민사회 역할론으로 해석 가능하다. 이는 구체적인 정치운동의 방향성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가 될 것이다. 정치정보의 흐름 역시 하향식과 상향식이라는 차이가 있다. 정보제공자도 위로부터의 사이버 정치운동은 주로 일 방향적인 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한다. 물론 상호작용의 기제로서는 웹 기능이 존재하지만 실제 이에 대한 반응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Castells 2001).

둘째, 위로부터 방식이 웹 사이트 중심의 오프라인 연계형 운동이 중심이라면 아래로부터의 방식은 같은 오프라인 연계형이지만 근본적으로 상호작용 효과를 상정한다. 상호작용성의 개념은 “기존 매체와 같이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정보의 흐름이 아니라 상호간의 수평적 정보교류를 촉진하여, 시민 참여를 유인하는 것”을 지칭한다(김용철·윤성이 2005, 114). 이러한 상호작용 효과는, 선거 또는 사회운동에서 인터넷을 매개로 유권자 또는 시민들과의 정치적 활동과 정보교류, 참여 동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통점인 오프라인 연계는 선거나 운동의 공간이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온라인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상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사이버 정치운동이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이슈를 스스로 제기하고 그 효과의 검증이 가능하다.

셋째, 이슈제기 능력은 두 방식이 큰 차이를 보인다. 먼저, 위로부터

터의 사이버 정치운동은 중앙당과 광역후보로 인해 지역이슈가 상대적으로 다루기 어렵다. 특히 전국 동시선거인 관계로 지역이슈보다는 전국이슈인 심판론과 역할론 등이 이슈로 제기된다. 지난 몇 차례의 지방선거에도 야당은 정권 심판론을, 여당은 지역 개발론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렇지만 아래로부터의 사이버 정치운동은 지역 이슈를 내설 있게 제기할 경우, 효과적인 “이슈 그리드” 또는 “지렛대 효과(leverage effect)”가 가능하다. 시민들의 정치적 판단에 있어 인터넷은 단순한 정보의 흐름이 아닌, 행동주의적인 정치참여를 가능케 하는 방식으로 진화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Chadwick 2006; Kluver et al. 2007). 이를 적당히 활용한다면 사이버 공간만이 아닌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지역 공약과 관련된 후보자 간담회 또는 공약 검증을 통해 다양한 정치활동이 가능하다. 여기에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연계성(network connectivity)이 기존 정치과정에서 지역정보의 유통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계점을 가진다. 앞서 지적한 바, 국내에서는 아직 지방선거국면에서 광역단체장을 제외하고 사이버 정치운동이 조직화되지 않았다. 아래로부터의 사이버 정치운동은 일부 지역 이슈와 자발적 지지집단 등에서만 나타났다. 그리고 시민사회에서의 상시적인 정치 감시활동이 있을 뿐이다. 진정한 지역 단위에서 지방의회나 자치단체장의 사이버 정치운동의 활용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역사가 긴 미국의 경우 지역적으로 아래로부터의 사이버 정치운동이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나타날 지방선거에서 이러한 흐름과 동학을 잘 파악하여 후속연구를 통해 한국 지방선거에서 사이버 정치운동의 과정을 좀 더 체계화하여 투 트랙 사이버 정치운동의 이중적이고 중첩적인 동학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홍강원택, 2008, 『한국정치 웹 2.0에 접속하다』, 책세상.
- , 2007, 『인터넷과 한국정치: 정당정치에 대한 도전과 변화』, 집문당.
- 김용철·윤성이, 2005, 『전자 민주주의』, 오름.
- , 2004, “제17대 총선에서 인터넷의 영향력 분석: 선거관심도와 투표참여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8집 5호.
- 김용호, 2003, “한국 정치집단의 유권자 연계 전략 :파벌, 정당, 그리고 「노사모」”, 『전통과 현대』 통권23호.
- 송경재, 2007, “e-party, 정당위기의 대안인가?”, 『21세기정치학회보』 제17집 1호.
- , 2005, “사이버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과 네트워크 정치참여”, 『한국정치학회보』 39집 2호.
- 민희, 2009, “인터넷 정치정보 상호작용과 정치참여 :18대 총선 네티즌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제19집 1호.
- 유석진·이현우·이원태, 2005, “인터넷의 정치적 이용과 정치참여: 제17대 총선에서 대학생집단의 매체이용과 투표참여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11권 3호.
- 윤성이, 2008, “18대 총선과 인터넷”, 21세기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 발표 자료집.
- , 2003, “16대 대통령 선거와 인터넷의 영향력”, 『한국정치학회보』 37집 3호.
- 이현우, 2002, “인터넷과 사회자본의 강화를 통한 선거참여: 미국 2000년 대선의 경우”, 『한국정치학회보』 36집 3호.
- 장우영, 2007, “ICTs와 정당의 ‘적응’: 정치인 팬클럽의 역할을 중

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7집 1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2009, “광역·기초 지방의원 홈페이지 모니터링 결과 발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보도자료”, <http://www.manifesto.or.kr> 검색일 2009년 10월 14일.

Anderson, Daviv, and Cornfield, Michael, 2003, *The Civic Web*. Boston: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Arterton, 1987, *Teledemocracy: Can Technology Protect Democracy?* Newbury Pack, CA: Sage Publications.

Barber, Benjamin, 2000, “Which Technology for Which Democracy? Which Democracy for Which Technology?”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s Law and Policy*. Issue 6.

Benkler, Yochai, 2006, “The Wealth of Networks: How Social Production Transforms Markets and Freedom.” <http://www.benkler.org> (검색일: 2008년 1월 20일).

Berman, Jerry and Mulligan, Deirdre, 2003, “Digital Grass Roots: Issue Advocacy in the Age of the Internet.” in Anderson, Daviv, and Cornfield, Michael. (ed.) *The Civic Web*. Boston: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Castells, Manuel, 2001, *The Internet Galaxy*. Oxford University Press.

Chadwick, Andrew, 2006, *Internet Politics: States, Citizens, and New Communication Technologies*. New York &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Coleman, Stephen and Blumler, Jay, 2009, *The Internet and Democratic Citizenship*.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avis, Richard, 1999, *The Web of Politics: The Internet’s Impact on the American Political Syste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Davis, Steve, Elin, Larry and Reeher, Grant, 2002, *Click on Democracy : The Internet’s Power to Change Political Apathy into Civic Action*. Cambridge: Westview Press.

Foot, Kirsten A., and Schneider, Steven M., 2006, *Web Campaigning*. MIT press.

Gibson, Rachel. Paul Nixon and Stephen Ward, 2003, *Political Parties and the Internet: Net Gain?* London: Routledge.

Granovetter, Mark,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6).

Kliver, Randolph, Jankowski, Nicholas, Foot, Kirsten, and Schneider, Steven, 2007, *The Internet and National Elec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Levine, Peter, 2003, “Online Campaigning and the Public Interest.” Anderson, Daviv, and Cornfield, Michael, (ed.) *The Civic Web*. Boston: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MoveOn.org Staff, 2004, *MoveOn’s 50 Ways to Love Your Country: How to Find Your Political Voice and Become a Catalyst for Change*. Inner Ocean Publishing, Inc.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 2009, *The Internet’s Role in Campaign 2008*. Washington D.C.: Pew Internet.

Reingold, Howard, 2002, *Smart Mobs : The Next Social Revolution*. Perseus.

Shirky, Clay, 2008, *Hear Comes Everybody: The Power of Organizing Without Organizations*. Penguin Press. 서키, 클레이, 『끌리고 쏠리고 들끓다』, 켈리온.

Tedesco, John C., Miller, Jerry L. and Spiker, Julia A., 1999, “Presidential Campaigning on the Information Super

Highway: An Exploration of Content and Form.” in Kaid, L and Bystram, (ed.) The Electronic Election. Mahwah, NJ: Lawrence Erlbaum.

Trippi, J., 2004, The Revolution Will Not Be Televised: Democracy, the Internet and the Overthrow of Everything. New York: Regan Books.

강금실을 좋아하는 사람들 <http://cafe.daum.net/kangkumsil>
myspace <http://www.myspace.com>
박사모 <http://cafe.daum.net/parkgunhye>
박준영 미니홈피 <http://www.cyworld.com/jeonnamlove>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
추미애를 사랑하는 모임 <http://cafe.daum.net/minjusrang>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http://www.manifesto.or.kr>
한국인터넷진흥원 <http://www.kisa.or.kr>

Local Elections and the Cyber Political Movement

Song, Kyong-jae
(Kyung Hee University)

Abstract

The use of the Internet in elections has become widespread in Korea. During the presidential elections in 2002 and 2007, as well as the general elections of the National Assemblymen in 2004 and 2008, candidates developed active cyber political movements and realized a certain degree of success. This study examines the possibility and limitation of the cyber political movement in the networked society by analyzing local elections in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cyber political movement has two forms, including the top-down and bottom-up methods, and induces different results depending on objects and methods. In addition, the two methods provide advantages such as the expansion of local issues, local agenda setting, or increased civic participation in the long term.

Keywords : Local Election, Cyber Political Movement, Networked Society, Leverage Effect, Network Connectivity